

노동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김 금 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I. 전태일과 함께 한 50년

지난 50년 세월 동안 우리는 전태일 열사와 늘 함께 해 왔다. 그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면서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라고 유서와 다름없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다. 그는 곧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그의 소망대로 그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가 떠난 뒤 곧바로 결성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통해서, 이소선 어머니의 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1970년대의 민주노동조합운동을 통해서, 1981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설립을 통해서, 1987년 노동항쟁을 통해서, 1988년의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서,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을 통해서,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통해서, 2019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의 건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범국민 행사위원회 국제포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태일의 “어떠한 인간적 문제이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적인 과제이다”라는 ‘인간선언’을 바탕으로 현재 노동운동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장기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역사가 우리를 일깨운다.

노동운동이 어려운 침체국면에 들면, 지난날의 장구한 역사에서 그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노동운동은 침체와 고양, 패배와 승리, 정체와 도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지나간 역사의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은 무수한 패배를 통해 승리의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고, 정체의 과정 속에서 고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연속 그 것이었다. 거기에는 참혹한 희생이 따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노동운동은 단순히 노동자계급의 지위 향상이나 권리 보장을 위해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은 초기 부르주아혁명 전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또는 공화제의 수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식민지 종속국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의 주력부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또 과시즘 체제에서는 반과시즘과 전쟁 위협 반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운동 발전 과정에서 때로는 폭풍과도 같은 혁명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어떤 형태로든 자본주의체제의 개혁과 변혁을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III. 노동운동이 직면한 중대 도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노동운동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마디로 정체와 패배 국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략 목표도 명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고, 조직 노선, 투쟁 노선, 그리고 정치 노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분과활동의 폐해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조직이나 현장 활동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역량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데서 반증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그 발전을 위한 길을 열정을 다해 찾아야 할 때라고 여긴다.

오늘날의 노동운동은 공통적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기술혁신, 코로나 펜데믹,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중대 도전에 부닥쳐 이를 밀쳐내고 명확한 진로를 찾기 위해 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

◇ 세계화

먼저 세계화는 통상적으로 자본, 상품, 기술, 서비스, 정보, 노동 등이 주권과 국경을 넘어 지구 차원에서 조직, 교류, 조정되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다. 세계화는 자본의 지구촌화(globalization)를 골간으로 한다.

슬라보예 지젝은 세계화를 거칠기는 하지만 매우 실감 나게 표현한다. “글로벌화(globalization)의 슬로건은 갈수록 세를 키우고 있다. 모든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전통,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형태까지도 위협하는 통합된 시장이 무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지젝, 2009, 20)라고 지적했다.

세계화는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나 노동운동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편이

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진출하여 흔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심한 고용 불안정을 확대·심화시킨다. 노자관계에서도 노동조합 조직을 막거나 깨뜨리려 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懈怠)하는 한편,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통해 노동 측 교섭력의 약화를 꾀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도 자본의 ‘탈출’ 위협에 직면하여 온전하게 행사되지 못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은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능력은 상대적으로 턱없이 취약하다. 세계화에 대한 장기 전략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투쟁전선마저 공고하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결국 각국의 노동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아서는 국제적 세력을 구축하기 어렵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를 수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자유주의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가 쇠퇴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시장만능주의, 효율성의 극대화, 자유경쟁 실현, 각종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크게 불리한 요소를 안겨 준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책들은 보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노동을 양산하거나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노동운동의 조직력을 낮추고 운동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노동운동에 대해 큰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 기술혁신

다음으로 현재 기술혁신이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단순한 기술발전이 아니라 상품 생산방식의 획기적인 발전을 비롯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자원의 개척 그리고 경영조직의 혁신 등에 따라 일어나는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오늘날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어려움과 함께 기회를 가져다주는 하지만, 노동운동 발전에 대해서는 희망 보다는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공학, 3D인쇄,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의 진행에 따라 그 중심에 자리 잡은 디지털 전환은 노동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동 개념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란 보고서에서 일의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된 미래를 맞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경고 있다.

◇ 노동의 미래 구상

노동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보고서와 독일 정부의 노동 4.0백서,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고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정부 권고 등을 통해 노동의 미래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보고서, 백서, 권고안 등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현재의 노동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회변동의 주요 추동력은 디지털화, 글로벌화, 가치와 요구들의 변화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핵심 의제는 ‘인간중심’이다. 인간중심의 일터 혁신과 기술에 대한 인간 주도, 인간 능력에 맞는 투자 확대를 통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개혁,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이동에 대한 지원, ‘좋은 노동조건’의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의 자율성(시간 주권)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성 평등 촉진, 단체 대표성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제 수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노동 세계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 방향과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혁신의 진행 속도보다 한층 뒤쳐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화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노동조합운동은 기술혁신에 대한 올바른 정책조치 내놓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대량실업과 엄청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노동운동의 발전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음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IV. 노동운동의 장기 전략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노동의 미래 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본의 지구촌화, 신자유주의, 기술혁신 특히 노동의 디지털화, 그리고 팬데믹이나 기후 위기 등은 노동운동 발전에 대해서는 크고 무거운 도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운동이 중대 도전에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의 미래 구상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 장기 전략 목표(총노선)

무엇보다 먼저 노동운동이 장기 전략(총노선)을 세우는 일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태일의 ‘인간선언’과 그가 추구했던 ‘인간조건’이 장기 전략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굶주리지 않고, 사치스런 의상은 아니더라도 헐벗지 않고, 고대광실은 아니더라도 편안히 쉴 곳이 있고, 아플 때 돈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착취와 억압을 당할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조건을 기본 요건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

인간조건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실현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장기 전략은 ‘인간조건 실현 사회주의’ 또는 ‘인간조건 실현 변혁적 노동조합운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전략 목표는 민주노총이 한 때 표방했던 ‘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 조직 노선

노동자가 지니고 있는 힘의 원천은 ‘수의 다수’에 있다. 아무리 수가 많다 하더라도 조직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통일, 투쟁과 활동, 정치적 영향력과 이념의 실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운동은 조직 노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조직노선에서는 조직의 확대와 조직형태에 관한 기본 방향 설정이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세계의 구조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재택 근무 노동자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다수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더불어 미조직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8년 현재 11.8%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사업장별 노동조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전국적 일반노동조합의 형태로 포괄하는 방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직 노선에 따른 확고한 방침을 기반으로 훈련된 조직활동가(Organizer)가 배치되어야 하며, 조직 활동을 위한 구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운동 전개에서 조직형태는 산업별 노조 형태가 가장 강력하고 통일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산업별 노조 건설이 조직 노선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산업별 노조 형태가 아니고서는 산업별 또는 업종별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은 57.9%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자주성과 민주성의 원칙, 집중성과 통일성의 원칙, 대중성과 지도성의 원칙, 목표지향성과 계획성의 원칙이 그것이라 하겠다.

◇ 투쟁 노선

다음으로 노동운동이 현재 밀어닥치고 있는 거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쟁 노선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투쟁 전선을 굳건히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현장을 비롯하여 지역 또는 전국 차원에서 체계적인 전선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투쟁의 형태도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말고도 노동운동이 정책과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교섭 기구를 통해 거기서 협의, 교섭, 합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정책과 제도 개혁은 기업 단위에서는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교섭체계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노동운동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정책적 요구 관철을 위한 위력적인 정치적 총과업 태세의 정비도 요구된다. 국가권력과 총자본에 맞서 힘의 대결을 벌여야 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투쟁 성과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고 각급 조직 사이의 조직적 통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 노선의 정립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벌이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기본 임무이다.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을 벌이게 되고,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세력화는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고 각급 선거에 참여하여 국가정책 결정기구로 진출하거나 국가권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투쟁 또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선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당 건설에 대한 기본방침을 채택할 필요가 제기된다. 노동자 중심의 정당·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는 정당·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통일적으로 추구하는 정당 건설을 주도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존재하는 진보 정당의 통일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화·통일을 위한 인민전선의 구축하는 일도 요구된다.

◇ 국제 연대 활동 강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세계의 디지털화가 빠르고도 폭넓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국제연대 활동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산업별노동조합연맹(GUFs), OECD노동조합자문회의(OECD-TUAC)에 가입하고 있으며, 지역적

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에 속해 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서도 각국 노동조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직과 기구를 통해 국제노동운동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 사이의 연대활동을 폭넓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리고 산업별 차원에서 공동활동과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상호협력과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미래를 위한 자기 개혁

노동운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거대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혁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상급조직 지도부에서부터 현장 단위의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전조직의 각급 단위에서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에 걸쳐 노동운동 기초와 자기 개혁에 대한 현장 토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장토의에서 나온 결과들을 집약하여 노동운동의 발전 방향과 자기 개혁의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

끝으로 한국노동운동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힘있게 미래를 열어가길 간절히 소망한다.